



보도	2026.2.9.(월) 10:00	배포	2026.2.6.(금)	
담당부서	기획조정국 전략기획팀	책임자	국 장	이창규 (02-3145-5900)
		담당자	부국장	강병재 (02-3145-5940)

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

- “금융소비자 최우선” 문화 정착 및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-
 -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 -

I.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5대 전략목표(“내적 쇄신 지속^①, 공정한 금융패러다임^②, 굳건한 금융시스템^③, 국민과 동반성장^④, 책임 있는 혁신기반^⑤)를 바탕으로
 -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함께 달성하며,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「2026년 업무계획」을 수립하였습니다.
 - **(전략① : 쇄신)**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검사·제재 프로세스 등을 혁신하고, 감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등 내적 쇄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.
 - **(전략② : 신뢰)** “금융소비자를 최우선”으로 하는 감독체계 확립, 민원·분쟁처리 혁신 등을 통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하고
 - **(전략③ : 안정)**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, 가계·기업 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등을 통해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.
 - **(전략④ : 상생)** 서민·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“따뜻한 금융” 실현, 민생금융범죄 척결역량 강화를 통한 “잔인한 금융” 혁파 등으로 국민과 금융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
 - **(전략⑤ : 미래)**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,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및 가상자산 거래환경 조성 등을 통해 책임 있는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.

II.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

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

5대 전략목표



쇄신



신뢰



안정



상생



미래

전략목표

15대 핵심과제

**일류
감독서비스를
위한 내적 쇄신**

- 감독행정의 투명성·공공성 및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.
- 금융감독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감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
**공정한
금융패러다임
구축**

- “금융소비자를 최우선”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.
- 민원·분쟁처리 혁신 등을 통해 사후적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
-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는 불법·불건전 행위에 대해 엄단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.
- 취약 분야 및 내부통제 점검 등을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.

**균건한
금융시스템
확립**

-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
- 가계·기업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
- 생산적 금융과 리스크관리 간 균형 하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**국민과
동반성장하는
선순환
구조 마련**

-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자금공급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.
-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“따뜻한 금융”을 실현하겠습니다.
- 민생금융범죄 척결역량 강화 등을 통해 “진인한 금융”을 혁파하겠습니다.

**책임 있는
혁신기반 조성**

-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.
-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,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
-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◆ 감독행정의 투명성·공공성 강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업무 효율화 등 보다 나은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적 쇄신 지속

1] **(감독행정 투명성·공공성 제고)** 금감원의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, 이를 쇄신 계기로 삼아 검사·제재 프로세스 개선 및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내부 경영혁신 추진

[검사 프로세스 개선(예시)]

- ① **중간 검사결과 발표 제한***
*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표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금융위와 협의하여 마련
- ② **수시검사 사전통지기간 확대**
- ③ **검사결과 처리 진행상황 통지방식 개선***
* 담당 검사역이 검사결과 처리 진행단계 입력시 진행단계가 금융회사에 자동 통지

[제재 프로세스 개선(예시)]

- ① **자율시정 기회 부여***
* 경미한 위반행위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조치 면제
- ② **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다양화***
* 법조인 중심의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,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자는 위촉을 사전 제한

[내부 경영혁신(예시)]

- ① **기관장 업추비 상세내역 공개, 알리오(ALIO)를 통한 경영공시 강화 등**

2] **(감독역량 제고)** AI 기술 접목을 통한 감독업무의 디지털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감독 경쟁력 강화 도모

- ① **민원·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여 금융소비자 관점의 지능형 대응체계* 구축**
* 유사사례, 판례 등을 자동 추천·제공하여 소비자 권익침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감독 서비스 품질을 균질화
- ② **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조사 프로세스 혁신**
- ③ **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광고 유형을 신속 모니터링하여 피해발생 예방**
- ④ **검사·제재 정보 제공방식을 개선*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UI/UX를 개편**
* 검색·추출·활용이 원활한 형태로 변환

◆ “금융소비자 최우선”의 감독체계 확립, 사후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및 불법·불건전 행위 엄단 등을 통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

③ **“금융소비자 최우선”의 감독체계 확립** “사전에방적 소비자보호 체계”로의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면 전환,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 거래 환경 마련 등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

- 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「**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***」 구축
* 모니터링 → 위험 포착 → 감독·검사 → 시정·환류
- ② **금융상품의 쉐 생애주기(설계·제조 → 심사 → 판매·사후관리)에 걸쳐 단계별 소비자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**
- ③ ‘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’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건 변경 차단을 위한 소비자 안내 강화

④ **(사후적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)** 금감원 민원·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,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기준 정비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도모

- ① **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한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기준 마련**
- ② 실손보험 **분쟁유형별 전담협의제 고도화** 및 전담협의·집중처리 가능 유형 추가 발굴
- ③ **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관련 고의·중과실 입증자료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**
- ④ **휴면금융자산 환급실적 제고 유도 및 관리 강화** 지도

⑤ **(불법·불건전 행위 엄단)**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한 주의 환기 및 검사역량 집중,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신속 조사 및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·감리 주기 단축 추진

- ① **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상시 소비자경보 신속 발령**
- ② **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 등에 대한 기획검사 및 영업점 검사 확대를 통해 판매절차, 내부통제 적정성 등 집중 점검**
- ③ **기업금융, 신규사업 가장,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신속 조사 및 엄중 조치 추진**
- ④ **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·감리 주기 단축 추진**

⑥ **(취약분야·내부통제 점검)**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 점검하고, 지배구조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유도

- ① 「**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**」에 따른 **불완전판매 예방 규제 실태점검** 실시
- ②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**CEO 선임절차** 등을 점검하고, 미흡사항은 「**지배구조 개선 TF**」를 통해 **제도 개선** 추진

◆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에 대한 대비, 부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

7 (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) 금융시장 급변 및 부실발생에 대비한 모니터링 강화,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사전 점검 및 부동산 PF 부실 감축 추진

- ①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밀착 관리*
* 연체율·부실채권 정리목표 징구·이행 점검, 상주검사역 파견 등
- ②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및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외환·금융규제 개선 등 지원
- ③ 부실채권 매각 유도 등을 통한 부동산 PF 부실감축 및 PF 건전성 제도 개선 추진

8 (안정적 부채관리) 가계대출 및 기업부채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안정적 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계·기업 부채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

- ① 가계부채 총량목표 준수 유도, 상환능력 기반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, 고정금리·유한책임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
- ②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엄정한 운영*을 통한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유도
* 주채무계열 정성평가시 관대화 경향 여부 점검 등
- ③ 기업 부실을 조기 포착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신용위험평가 체계 개선*
* 평가등급 세분화 등을 통한 고위험기업 밀착 관리 등

9 (감독제도 개선)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개선 및 금융 산업별 핵심리스크 요인에 초점을 둔 감독제도 정비 등 균형감 있는 제도개선 추진

- ① (은행) 글로벌 기준(Basel Ⅲ)을 준수하면서 자본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 도입
- ② (보험) 정책프로그램을 통한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, 계리가정 적정성 검증을 위한 '계리가정보고서' 도입
- ③ (금융투자)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 및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 도입 등
- ④ (중소) 저축은행·상호금융의 부동산·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, 지역·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 마련

◆ **자본시장 혁신**, 서민·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“따뜻한 금융” 실현 및 “잔인한 금융” 혁파를 통해 국민과 금융의 동반성장 구조 마련

10 (**자본시장 혁신**) 모험자본 공급 확대, 매력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,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자금공급 원활화 및 투자자보호 동시 추진

- 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* 발굴 등 **관리·감독체계** 마련
* 정책적 육성 산업의 공급자금 등에 대해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시 인센티브 부여 등
- ②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한 **외국인 투자제도를 지속 보완하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기반** 마련
- ③ 조각투자·토큰증권(STO) 등 **혁신 신상품의 거래안정성 확보**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**감독방안** 마련

11 (**“따뜻한 금융” 실현**) 은행권 포용금융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,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·금융지원 강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등을 통해 서민·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 및 성장 지원

- ① 은행권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**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** 마련 등을 통해 **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** 유도
- ② 중·저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**금리단층 현상 완화** 등을 위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**연계공급망 금융 활성화** 방안 마련
- ③ **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온·오프라인 금융교육 프로그램**을 통해 체계적인 금융지식 제공 등 **금융역량 강화** 추진

12 (**“잔인한 금융” 혁파**)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현장 집행력(단속·예방 등) 강화 및 관련 피해의 실효적 구제 등 민생금융범죄에 강력 대응

- ① 민생금융범죄(불법사금융 등)에 대한 **대응 강화**를 위해 「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」 추진
- ② 「**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**」 확대·개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추심 관련 **초동대응(사전경고 등) 강화**
- ③ 범정부 차원의 「**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**」을 적극 추진하고, **범죄자금 이동 차단**을 위한 다층적(계좌관리-이체-출금) **관리체계** 마련
- ④ 수사기관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**민생금융범죄에 대한 국가적 수사력 제고**

◆ **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,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및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**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**혁신 및 미래 성장 기반 조성**

13 **(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)**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확립 및 금융회사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 등을 통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

- ① 금융권 보안취약점 사전 식별 및 분석·평가를 강화*하고, 중대 취약점 미보완 회사는 현장점검·검사를 실시하여 취약점 사전대응 강화
 - *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보고서 분석주기 단축 등
- ② IT사고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「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*」 마련
 - * 사고발생시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절차, 신속복구 체계 등
- ③ 온라인 플랫폼 및 금융결제의 결합이 보편화된 환경에 맞춰 **이용자보호 강화방안** 마련

14 **(디지털 혁신, 가상자산 시장 신뢰성 제고)** 혁신과 책임이 공존하는 금융AI 생태계 조성, 데이터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이용자 중심의 가상자산 감독·조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및 거래환경 조성

- ① 금융회사 AI 활용의 공정성·투명성·책임성 제고 및 신뢰기반 조성을 위해 「**금융AI 윤리지침**」을 제정하여 AI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
- ②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품질 제고 및 결합데이터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고,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체계 등 강화
- ③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

15 **(지속가능한 성장 지원)** 기술·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업권별 제도 정비 및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 등을 통해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지원

- ① AI 등 신기술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검증체계 마련(은행), 카드사 업무범위 확대 등 신사업 수행 지원(중소), 자산승계 목적 신탁상품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지원(금투) 등
- ② 금융권 공동의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원방안 등 검토
- ③ 실손·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품구조 개편, 보상기준 개선 등 추진

[별첨]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